

FOR IMMEDIATE RELEASE

November 23, 2021

Contact:

Jung Woo Kim (Korean), jung@nakasec.org

Taneka Hye Wol Jennings (English), taneka@adopteesforjustice.org

Korean adoptees ask the broader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strongly support passage of the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in the U.S. Congress

Chicago, IL – On Tuesday, November 23, Adoptees For Justice – an adoptee-led project of NAKASEC, the larger NAKASEC Network (MinKwon Center, NY; Woori Center, PA; Hamkae Center, VA; HANA Center, IL; Woori Juntos, TX), Korean American Coalition,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and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Chicago co-hosted an Adoptee Citizenship Act briefing with the Korean media.

Emily Warnecke, a Korean adoptee without citizenship who has been living under ICE surveillance since 2000, shared about her situation and urged the community to help get the Adoptee Citizenship Act passed as soon as possible. Emily, who is disabled, does not have access to the government benefits she needs to make ends meet and for her health care because she does not have citizenship.

Taneka Hye Wol Jennings, a Korean adoptee and Campaign Director for Adoptees For Justice, shared an overview of the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and its current status in the U.S. Congress (H.R.1593, S.967).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Adoptees for Justice has reached out to 265 House and Senate offices, had meetings with 74 House and Senate offices, and played a central role in securing bi-partisan bill co-sponsorship from 58 House Representatives and 11 Senators, in addition to the bill’s lead Sponsors.

Becky Belcore, a Korean adoptee and Executive Director of NAKASEC, urged Korean American community members to support Adoptees For Justice and its work in these four ways:

- 1. Support an all inclusive bill that secures citizenship for all adoptees, regardless of age, criminal system interactions, and deportation.** Adoptees For Justice firmly believes that no adoptee can be left behind. Korean adoptees already have been separated from their birth families, language and culture, and some do not have positive adoption experiences. As an adoptee-led organization working on this legislation, we are asking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stand with all of us. Every adoptee should have been a U.S. citizen from the time of their adoption.
- 2. Sign our Letter of Support.** Your support letter will go to each person’s two U.S. Senators, one U.S. House Representative and Senate Judiciary Committee Chair, Senator Dick Durbin (D-IL). Take one minute now to send a Letter of Support: allianceforadopteecitizenship.org/petition

- 3. Sign up to participate in legislative visits with Adoptees For Justice.** Legislators care most about their constituents' opinions. Adoptees for Justice can arrange the meetings and provide translation from Korean if needed. Sign up to volunteer for legislative visits here: [Adoptees For Justice Volunteer Sign Up](#)
- 4. Donate to Adoptees For Justice via NAKASEC.** As community members consider end-of-year donations, Adoptees for Justice needs resources for 2022 to support our adoptee consultants' work every day to move the legislation forward, for supplies, printing, postage, travel and other costs. Donate here: [Adoptees For Justice Donations](#)

긴급 보도의뢰서

2021년 11월 23일

보도 관련 문의

김정우 (한국어): jung@nakasec.org

Taneka Hye Wol Jennings(영어): taneka@adopteesforjustice.org

한인 입양인들은 한인 커뮤니티에게 2021년 미국 의회에 상정 되어있는 Adoptee Citizenship Act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통과할수 있도록 강력히 지지해 줄 것을 한인 커뮤니티에게 요청합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 11월 23일 화요일 Adoptees For Justice (정의를 위한 입양인) – 미교협 네트워크인 입양인 주도 프로젝트 가입 단체인 (뉴욕주의 민권센터, 펜실베니아주의 우리센터, 버지니아주의 함께센터, 일리노이주의 하나 센터, 텍사스주의 우리 훈뜨스), 미주한인연대, 미주한인여성회, 시카고한인회가 공동 주최한 Adoptee Citizenship Act (입양인 시민권법안) 기자회견을 한국 언론과 함께 했다.

2000년부터 이민 단속국의 감시하에 살고 있는 서류미비 한인 입양인 Emily Warnecke (에밀리 왈나키씨)는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나누면서 지역 사회에 입양인 시민권법이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가 도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에밀리씨는 3개월 생때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현재 미국 시민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들과 건강 보험을 받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 입양인이자 정의를 위한 입양인의 캠페인 이사인 Taneka Hye Wol Jennings는 2021년 입양인 시민권법에 대한 개요와 미국 의회(H.R.1593, S.967)에서의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정의를 위한 입양인 팀들은 265개의 하원 및 상원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원 74개 관공서와 회의를 가졌고, 이 법안의 주도적 발의인 외에 하원의원 58명, 상원의원 11명으로부터 초당적 법안 공동 발의를 확보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인 입양인이자 미교협 사무총장인 Becky Belcore (베키 벨코어씨)는 정의를 위한 입양인의 활동을 지원할수있는 네 가지 방법을 한인 커뮤니티분들에게 따라주기를 촉구했습니다.

첫번째로 연령, 범죄 기록 및 추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입양인이 시민권을 받을수있는 포괄적인 법안을 지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를 위한 입양인(Adoptees For Justice)은 모든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 입양인들은 미국으로 입양 온 이후 자신과 피가 섞인 가족들과 찢겨지고, 모국 언어, 그리고 한국 문화와 분리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입양부모의 학대 및 힘든 경험이 있는 입양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입양인 주도 단체로서 한인 커뮤니티가 저희와 함께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입양인은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의원에 보내는 서신에 서명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의원에 보내는 서신에는 각 자치구 2명의 미국 상원의원과, 1명의 미국 하원의원 및 상원 법사위원장인 Dick Durbin 딕 덜빈 상원의원(D-IL)에게 전달됩니다. 1분만도 걸리지 않으니 지금 지원 서신을 보내주세요:
Allianceforadopteecitizenship.org/petition

세번째로 정의를 위한 입양인과 함께 의원 방문에 참여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각 자치구 유권자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의를 위한 입양인팀들이 회의를 주선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어 통역도 제공해 드릴것입니다. 의원 방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미교협을 통해 정의를 위한 입양인 캠페인에 기부하십시오. 정의를 위한 입양인 캠페인은 2022년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률자문과 법안의 여부를 진전시키기 위해 고용해야하는 컨설턴트 비용 및 인쇄, 우편 요금, 여행 및 기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여기](#)가셔서 기부하시면 되겠습니다.